

월요광장

7년의 법칙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로 개발했다. 또 아시아 중심의 콘텐츠 수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주나 유럽 등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장르의 견본시에 한국공통관을 열었고,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 시장 개척을 위한 로드쇼를 열었다. 스토리산업의 육성도 시작하였다. 결국 우리 콘텐츠산업이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빅 킬러 콘텐츠'가 꾸준히 발굴되어야 한다. 바로 이 빅 킬러 콘텐츠의 출발은 '좋은 스토리'에 있었다. 국내 최고 규모의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을 열기 시작했다. 단순히 수상작 선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상작들이 더 발전해 실제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수상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수상작들을 국내외 콘텐츠 제작자·투자자들에게 꾸준히 소개하였다.

7년이 흐른 지금, 이제 그동안의 노력이 열매를 맺고 있다. 2011년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수상작, 김원석 작가의 '국경 없는 의사화'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되었다. '포맷'이라는 말 자체를 낯설어 하던 우리 방송계가 이제 매년 10편 이상의 예능 포맷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류 수출액은 약 4배가량 증가했으며,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 '한류 팬'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콘텐츠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공이다. 영세한 환경에서도 열정과 땀으로 산업을 키워 온 그들의 노력이 이러한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들의 노력이 빛바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작지만 중요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노라 자부한다. 아직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야 할 일은 많다. 지난 7년간 콘텐츠산업 환경은 많이 변해 왔다. 이제 콘텐츠 소비는 일상이 되었고, 콘텐츠 창작 또한 '남다른 누군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장르와 장르, 산업과 기술, 산업과 산업이 결합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은 날이 지열해졌고, 한류의 최대 수출국가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이 살아남고, 나아가 전 세계에 으뜸으로 서기 위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야 할 일은 늘어난다.

정부의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문화창조 융합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창조 아카데미'와 융복합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문화창조 벤처단지'의 운영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 이 두 곳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우리 콘텐츠의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현지와의 협력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주목하고 있는 두 곳은 중국 충칭과 인도네시아다. 베이징·상하이 등에 비해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도시, 중국 충칭은 중국 내륙의 중심지이자 중국 내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이곳을 새로운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더 큰 콘텐츠 시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충칭시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이제 곧 그 계획의 실현이 눈앞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한류에 호의적인 젊은 층이 많다.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양국 콘텐츠 기업들의 교류 협력과 한류 콘텐츠 소개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한다.

지난 7년을 자부한 만큼, 앞으로의 7년을 기대한다. 지난 7년의 성과보다 더 많은 성과를 만드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충실히 해내고자 한다. 그때, '7년의 법칙'이라고 부듯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기고

5·18정신의 기억과 미래 교훈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평화, 공동체 등은 5·18정신과 광주정신을 지탱하는 중심 요체들이다. 이러한 보편가치는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학문적·사회적 실천을 통해 정립되었다. 최근의 일로 보자면, 1998년 '아시아인 권한장'의 광주 선포, 2011년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2013년 광주에서 촉발된 '인권도시' 담론의 영향으로 유엔인권이사회와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 채택 등을 꼽을 수 있다.

5·18정신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추동해 왔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1987년 6월항쟁, 1995년 광주특별법 제정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처벌, 1997년 12월 수평적 정권교체 등을 통해 5·18은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서 저항공동체를 형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고자 했던 시민들의 자기희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숭고한 정신이었다.

5·18정신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진정한 역할이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은 국가가 존재해야 할 제1의 이유이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현재의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바로 5·18이 현재와 미래에 주는 교훈 때문이다. 그러나 5·18은 여전히 논쟁적 담론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뿐만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과 제창 요구에 대한 국가의 거부 등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5·18정신은 순수하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지난한 5월운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실천의 구성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5·18정신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과정에는 상이한 기억과 정치적 입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주목할 것은 새로 형성된 현재의 '5·18의 의미와 투쟁' 국면의 실천적 의미이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5·18의 제도화'가 완료되면서 역사장출의 추동력을 상실해 버린 5·18을 부활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5·18정신의 계승의 관점에서 보면, '5·18의 부활'은 5·18이라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하나의 교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5·18의 '승인' 가치

가 부정되는 상황 속에서 5·18의 부활은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18정신의 창조적 기억이라는 미래의 지향뿐만 아니라 5·18의 진상규명 등 일련의 과거사 정리에 대한 냉철한 성찰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곡'과 '기념곡' 논쟁으로 5·18이 다시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정신'이라는 담론은 자칫 5·18정신을 광주라는 지역으로 제약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광주정신은 5·18정신의 유지, 확대, 강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시대적 속성물이다. 여기에는 보편가치로서 이미 세계인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5·18정신을 '광주'가 보다 책임 있는 연대의 관점에서 계승하고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수축되고 만다는 사실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정신은 5·18정신을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실천해 나갈으로써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항상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함께 있어야 한다.

기고

김영란법, 농축산물 예외 적용해야



김원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농촌지원담당

에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액수를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벌 또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에 대해 일부 국회 의원은 물론 정부부처 간, 관련 업계 등 여러 곳에서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위원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기다리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공청회도 있었다.

각계 의견을 종합해 보면 '농수축산물 등 일부 업종은 큰 타격이 우려되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패적결을 위해 원안대로 시행하자'는 의견, 그리고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보완하자'라는 의견이 있다. 주요 쟁점은 시행령(안)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적정인가 여부다. 3만원이 넘는 식사제공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그리고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부분이다.

농업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를 클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안)에서 농축산물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유가 있다. 농협이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주요 농축산물 40%가 명절

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과일은 50%, 인삼은 70%,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는 것이다. 수산물도 지난해 국내 총 소비액 중 21%가 명절에 팔렸고 특히 굴비는 95%나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라는 것이다.

김영란법 준수를 위해 식당이나 선물의 경우 저렴한 수입 농수축산물이 우리 명절에 소비되지 못한 농수축산물이 평상시 시장에 공급되면 가격하락으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다. 그동안 농업계는 WTO나 FTA확대에 따른 값싼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의 농수축산물 생산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무용지물이 될 위기다. 팔리지 의문인데 생산의욕이 생길지는? 영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즉 생존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이 법은 시행 전에 보완되어야 한다. 명절에 친·인척 등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미풍양속도 고려하고 농수축산물의 특수성도 반영하는 수정·보완된 법률(안)을 바라는 이유다.

비단, 농업계뿐 아니라 사료, 유통, 택

배, 관광 그리고 음식점계 등 연관 산업도 매출감소와 내수위축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식업중앙회 산하 외식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5%인 4조 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도 안 좋아 대통령이 해외까지 나가서 셰일즈 외교를 하는 경제위기 시대다. 지난 5월24일 공청회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언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간절히 기대한다.

특히, 농업인들은 WTO나 FTA의 확대대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든지 오래다. 농사지를 사람이 부족해 걱정이데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가치는 무려 27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같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농업·농촌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한국농업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지켜 볼 것이다.

社說

곡성에 핀 '소금꽃'...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아파트에서 투신한 대학생에 부딪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곡성군청 공무원 권(敍) 양대진(39·7급) 씨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자살한 대학생의 가족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숨진 양 씨의 부인은 대학생 가족의 거듭된 사과에 슬픔을 가누고 분노보다는 용서를 택했다고 한다.

양 씨는 퇴근길 아파트 앞에서 투신한 대학생에 부딪혀 세상을 떠났다. 현장에는 이날 버스정류장까지 마중 나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만식의 아내와 여섯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1초만 늦게, 1m만 옆으로 걸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추모 공간을 뒤덮었다.

가족과 일밖에 모를 정도로 성실했던 양 씨는 업무 특성상 늘 광주행 시외버스 막자 시간까지 일할 정도로 야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사고 당일에도 전날까지 열린 장미축제 관련 업무를 마치고 오후 8시46분께 퇴근, 마차를 타고 광주의 집으로 향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열린 세계장미축제

에 곡성 군민의 8배에 달하는 23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 것도 고인의 이 같은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날마다 폭염 속을 누볐던 양 씨의 등엔 어느덧 '소금꽃'이 피었다. 등골에 흐른 땀이 그대로 마른 것이다. 동료 공무원의 추모시 '소금꽃'이 심금을 울린다. "~만식의 아내에게 이별의 말도 못하고/곡성의 눈물이 되었다./ 마흔의 우직한 그는 소금꽃을 피웠다."

고려대 출신으로 지난 2008년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양 씨는 공직 생활이 8년밖에 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할 처지다. 하지만 곡성군과 경찰서 고인이 '순직' 처리될 수 있게끔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피해자일 것이다.

한편 투신한 유 씨는 지역 한 국립대 4학년으로, 6개월 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또한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피해자일 것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파주만 일어나는 것일까. 세상이 참으로 알갭다. 졸지에 변을 당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섬마을 여교사 관사에 CCTV 하나 없었다니

전남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 올해 첫 부임한 여교사가 집단 성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파장이 크다. 더욱이 피의자들은 여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학부모 등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마을 사람들로 밝혀져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목포경찰은 어제 섬 초등학교 관사에 침입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새벽 마을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에 취한 여교사에게 번갈아 몸을 갖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 발령받아 홀로 관사에서 생활해 온 여교사는 피의자 중 한 사람인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종종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우연히 만난 가해자들의 강권으로 주량을 훨씬 넘기고 말았다. 이후 피의자들은 교사를 바래다준다며 관사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교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피의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편한 섬 생활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자녀 교육에 애쓰고 있는 교사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인면수심'의 행태를 저질렀으니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여교사가 기거하던 관사에는 경비 인력은 고사하고 CCTV 하나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의자들이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는 데 보아야 할 것이다. 이리니 여교사들은 격오지 근무를 극력 회피하고, 교사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져 지역 경쟁력 저하의 큰 요인으로까지 대두되는 것 아닌가.

당국은 당장 전담 등 격오지 교육 생활 실태를 조사해 불만·불편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불미스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겠다.

無 等 鼓

조선 시대 관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배를 두려워했다. 그중에서도 제주 도나 흑산도 같은 섬으로의 귀양은 절망 그 자체였다고 한다. 거리가 멀고 뱃길이 험해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탓이었다.

역사학자 이덕일 씨는 자신의 저서 '고금통의'에서 '섬 유배는 괴로운 형벌이었지만,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대과에 급제한 일류 교사에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축복이었다'고 섬

의 정약전은 무려 1년 가까이 흑산도 사람들을 설득해 겨우 우이도로 이주했다. 결국 선생은 우이도에서 세상을 떠났다. 총체 흉흉한 교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흑산도와 우이도 사람들은 학식과 인품이 탁월했던 정약전을 서로 모시기 위해 정갈한 밥을 벌일 정도로 선생을 존중했던 것이다.

며칠 전 전남의 한 섬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부

섬마을 유배

의 섬은 주거·교육 환경이 열악한 탓에 교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심지어 유배됐는데 어부나 천민 등 섬사람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 모두에게 훌륭한 선생님이로 환영받았다고 한다.

정약전은 순조 14년 강진에 유배 중이던 정약용의 해배(유배가 풀림) 소문이 들자 자신을 만나려는 동생이 바다를 두 번 건너게 할 수 없으며, 흑산도 앞의 섬 우이도로 이주하려 했다. 하지만 흑산도 사람들이 결사반대하자 우이도 사람들은 밤중에 배를 대고 정약전을 모셔 갔다. 아침에 이 사실을 안 흑산도 사람들이 추격대를 보내 다시 정약전을 모셔 왔다.

이런 성폭행 사건이 농어촌 지역 선생님들의 교육 의지를 해칠까 우려된다. 선생님에 대한 성폭행은 인륜 파괴 행위다. 임벌이 당연하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지 사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